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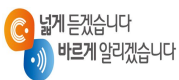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5.12.30(수). 15:30	배포일시	2015.12.30(수) 13:0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윤인대 과장 (044-215-2730)	담당자	조성중 서기관(044-215-2731) josseong@korea.kr

제목 :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

- 금일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를 붙임과 같이 배포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붙임>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

2015. 12.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 2015년 한국경제 평가	1
II . 부문별 주요 성과	4
III . 향후 과제	9

I. 2015년 한국경제 평가

◇ 글로벌 교역부진, 메르스 충격에도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달성

1 세계경기 부진에도 2만불이상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

○ 우리 경제는 '15년 3/4분기까지 2.5% 성장하여 국민소득 2만불,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성장률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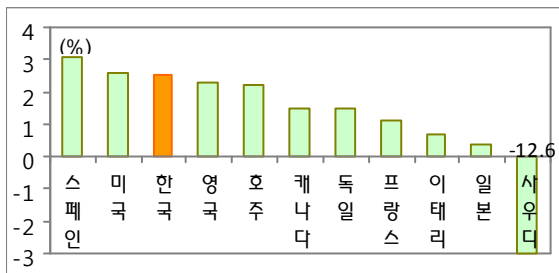
* 스페인은 장기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률 반등 → 이를 감안시 사실상 2위

- 특히, 추경 등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15.3/4분기 1.3% 성장하며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을 끊고 5년만에 가장 빠른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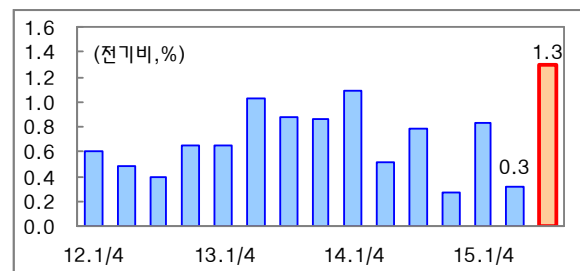
○ 메르스 충격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경기회복을 견인하였으며,
순수출이 과거처럼 성장에 기여했다면 3% 후반대 성장도 가능

- 수출도 글로벌 교역부진, 유가 하락 등 감안시 상대적 선방
(수출순위 7→6위 상승, 10대 수출국중 수출증가율 4위<세계 Δ11.2, 韓 Δ7.7%>)

주요국 성장률 비교('15.1/4~3/4분기)



분기별 성장률 추이



* 자료 : 블룸버그 국민소득 2만불/인구 2천만 이상 국가

* 자료 : 한국은행

○ 이러한 회복세에 힘입어 GDP 규모가 13→11위로 상승 전망(IMF)

-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제조업 강점, 기술 개발, 기업 환경 개선 노력 등 감안시 '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성장 전망

* CEBR은 한국경제가 '30년대중 세계 5위권 진입, 대부분 유럽국가 추월 예측

세계 GDP 규모 순위 전망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년(IMF)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태리	인도	러시아	캐나다	호주	한국
'15년(IMF)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태리	브라질	캐나다	한국	호주	러시아
'30년(CEBR)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영국	한국	브라질	프랑스	캐나다	인나	러시아	이태리

2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민생여건 개선

- '14년 취업자수가 '02년 이후 최대폭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되며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1~11월 65.7%)

* '0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청년 취업자도 2년 연속 증가

- 내수 회복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상승 3%대 회복, 가처분소득 증가 등 소득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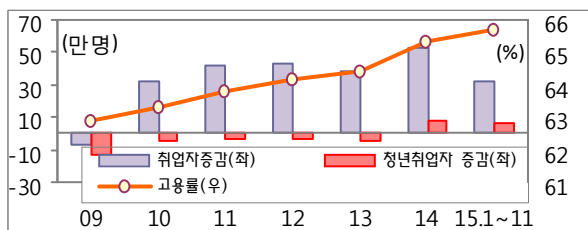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 ('12)5.3 ('13)3.9 ('14)2.5 ('15.1~9월)3.4

* 실질GDI 증가율(전년동기비, %) : ('12)2.3 ('13)4.0 ('14)3.7 ('15.1/4~3/4)6.5

- 이에 따라 **소득분배도 '06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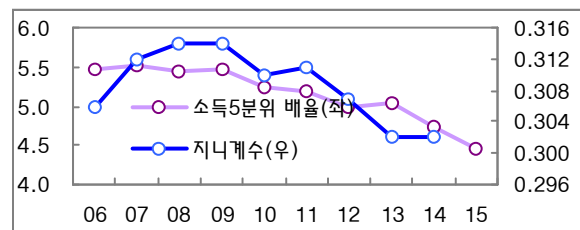
* 소득분배 개선 속도도 OECD 국가중 우수한 수준(16개국 중 5위)이며, WEF는 선진 30개국 중 우리나라를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분류('15.9)

취업자 증감 및 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고용률은 15~64세 기준

소득분배지표 추이



* 자료: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은 3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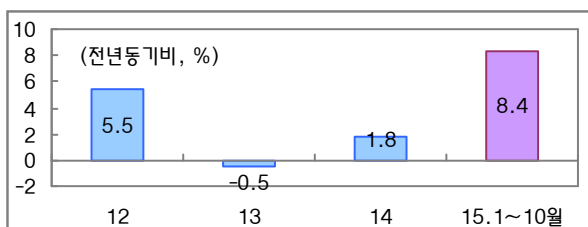
3 세수부족 고리를 끊고 세계 최고 수준 재정건전성 유지

- 내수 회복, 비과세·감면 정비에 힘입어 국세 수입이 큰 폭 증가 ('15.1~10월 국세수입 14.9조↑)하며 **4년만에 세입예산 초과 달성** 전망

-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IMF, OECD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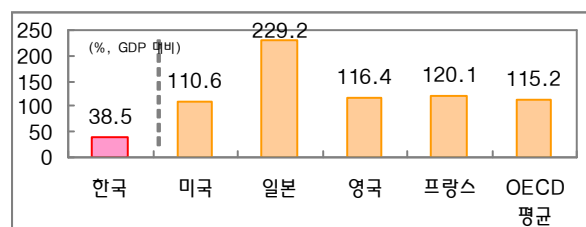
* 한국은 확장적 재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건전화 필요없는 수준 (OECD, '15.11)이며 재정건전성과 여력은 세계 최고 수준(IMF, '15.6)

국세 수입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15년은 1~10월 수입 기준

국가채무비율 국제 비교('15년)



*자료: OECD(15.11), 한국은 '15~'19 중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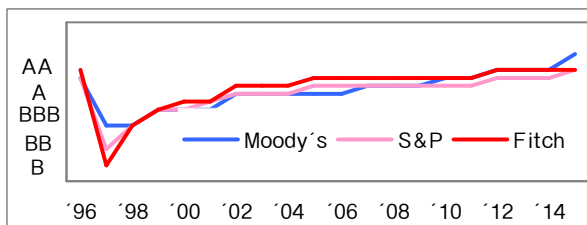
4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창조경제 성과가 점차 가시화

-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2년차를 맞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 집중 추진
 -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전기 마련
 -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기본계획 수립 등 금융·교육개혁 기반 마련
-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M&A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벤처·창업붐 확산
 - * 신설법인(만개) : ('12)7.4 ('13)7.6 ('14)8.5 ('15.1~10)7.7, 연간 9만개 돌파 전망
- IMF·OECD는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성장전략을 G20 국가 중 1위로 평가한데 이어 이행실적도 최고수준(2위)으로 평가

5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달성

- 9.15일 S&P가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A+→AA-)한 데 이어, 12.19일에는 Moody's가 건국 이래 최초로 Aa2 등급 부여
 - * Moody's에서 Aa2(세번째 높은 등급) 이상인 국가는 G20 중 7개국에 불과
 - 최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부터 사우디, 브라질 등 신흥국 까지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것과 대비
 - * '15년도에 투자적격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향 조정
- 이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 ① 차별화된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며,
 - ②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임

3대 신평사 신용등급 추이



*자료: 신평사, 등급은 S&P기준

대외건전성 지표 현황

	'12.4/4	'15.3/4
· 단기외채 비율(%)	31.3	29.2
· 순대외채권(억불)	1,296.5	3,128.9
· 외환보유액(억불)	3,269.6	3,681.1

*자료: 한국은행

II. 부문별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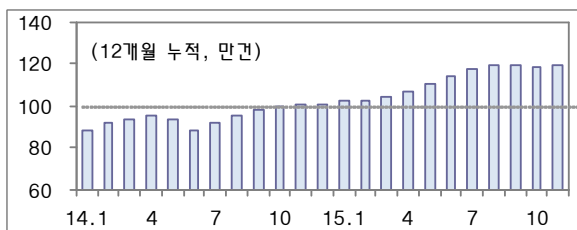
1 민생경제 회복

◇ 내수 개선과 정책 노력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지속하고 경제 민주화 진전, 사회안전망 확충

1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매매거래량이 2년 연속 1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정상화 지속**(분양물량도 역대 최대치인 49만호<1~11월>)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로 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하고 역대 최대 수준 공공임대주택('13~'17년 52.7만호) 차질없이 공급

주택 매매거래량



* 자료: 국토부, 감정원, 12개월 누적 기준

기업형 임대주택 주요 추진경과

구분	내용
법률 제·개정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정('15.8.28)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5.12.15)
사업 현황 (14만호)	· 민간제안 사업장(5,529호) · LH택지 공모(5,222호) · 정비사업 연계(3,197호)

* 자료: 국토부 등

2 경제민주화 정착 및 중소기업 체감경기 개선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핵심입법을 완료*** 하고, 하도급·가맹·유통 등 **중소·서민과 밀접한 개혁과제 현장 체감도 큰 폭 개선****

* 경제민주화 관련 20개 법안중 13개 법안 입법 완료 ** 현장점검결과 하도급업체 92%, 유통 납품업체 90%이상 거래관행 개선 평가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 노력,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해외진출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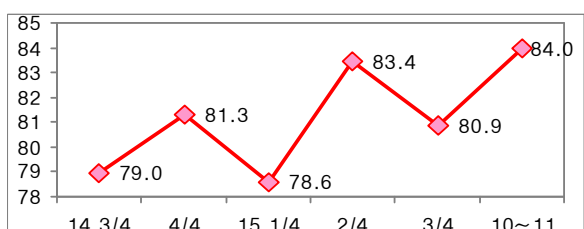
* 중소기업 수출 비중 : '14년 33.8→ '15.1~10월 35.8%

민관합동 T/F 현장점검 결과

	구분	조사결과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10.5% 감소
	대금 미지급행위	△8.7% 감소
유통	기본장려금 징수	△17.6% 감소
	인테리어비용 전가	△11.1% 감소
가맹	위약금부담액	△65.1% 감소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업황 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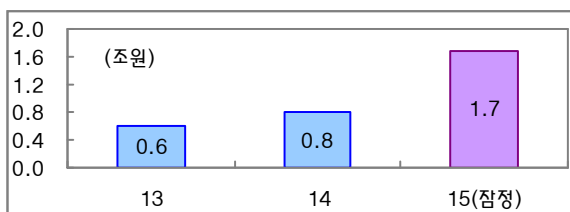


* 자료 : 중기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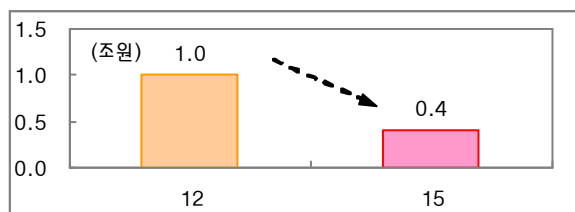
3 맞춤형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부담 경감

-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확충
-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고용복지⁺ 센터 확대(10→40개)
 - *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자 수가 22.7% 증가, 전국 평균(11.4%)을 크게 상회
-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근로장려세제 지원액



4대 중증질환 비급여부담액



* 자료: 기획재정부, '15년은 자녀장려세제 포함 * 자료: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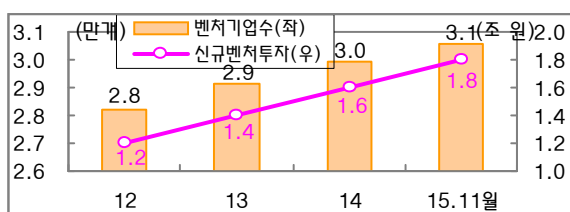
2 경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되며 제2의 벤처·창업붐이 확산되고 FTA 시장규모 세계 3위 달성 등 우리경제의 역동성 제고

4 제2의 벤처·창업붐 확산 등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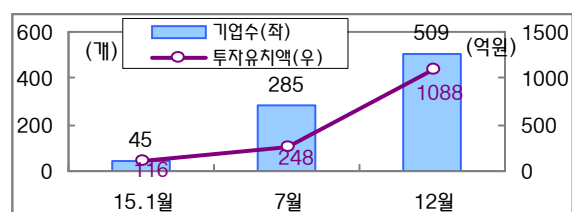
-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7월)하고, 창업기업 지원자금(1.3→1.5조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 * OECD·EU는 글로벌 저성장 환경에서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평가, 사우디·브라질 등도 창조경제 모델 도입 추진중
- 벤처기업수가 3만개를 돌파하고, 신규 벤처투자가 '00년 이후 최대치인 1.8조원을 기록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가 점차 가시화

벤처기업수 및 신규벤처투자



* 자료: 중기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지원실적



* 자료: 미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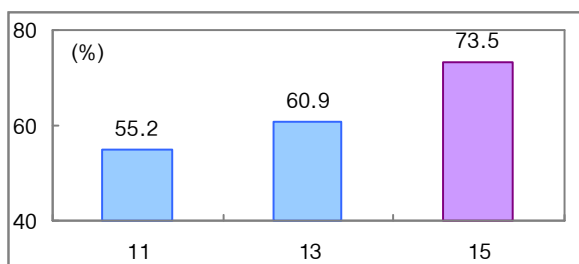
5 FTA 시장규모 세계 3위 달성, 사상최초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

- 한·중, 한·베, 한·뉴 FTA 발효로 FTA시장 규모가 '13년말 60.9%(세계 5위)에서 '15년 73.5%(3위)로 확대

* 특히, 한-중 FTA 발효('15.12.20일)로 세계 3대 거대·선진 경제권인 미국·EU·중국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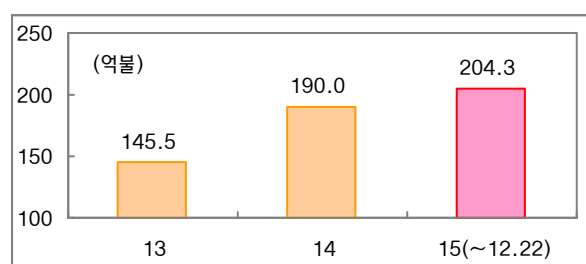
- 규제개혁, 투자활성화 노력으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역대 최고 순위(4위)를 기록하고 사상최대 규모(204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FTA 시장규모추이



* 자료: 산업부, 전세계GDP 중 FTA체결국 GDP 비중

외국인투자 추이



* 자료: 산업부

6 제조업 혁신 3.0으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신산업 육성

-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융합 신산업 투자 확대**, 혁신산단 조성*** 등 「제조업 혁신 3.0」 본격 추진

* 1,240개 스마트공장 보급, 불량률 33% 감소, 원가 23% 절감 등 성과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30대 소재부품 개발에 민관합작 1.2조원 투자

*** 5개 산학융합지구 조성 완료, 5,515명 인력 양성, 200개 기업연구소 유치

- 기후변화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전기차·충전소 대폭 증가* 등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美·獨·日 등 선진국에 4,000억원 수출 성과**

* 전기차(누적 대) : ('14)3,044 → ('15.11)5,662 / 공공급속충전소(누적 기) : ('14)237 → ('15.11)337

**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에너지 자립섬 모델'도 개발·수출

- 농수산업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성과 확산

* 스마트팜('14→'15) : (시설원예) 60 → 364ha (축산) 30 → 156호

3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 ◇ 수십년간 방치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적폐에 본격 개혁 착수
- ◇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적 개혁의 계기를 마련

7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혁 전기 마련

-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여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 국제노사정기구-ILO 컨퍼런스 등 국제사회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협약의 모범사례”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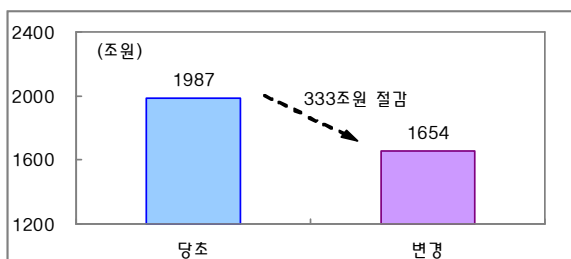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5대 노동개혁법안 기대효과

5대 법안	기대 효과
· 근로기준법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 파견근로자보호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5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 · 70만명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 286만 근로자와 가족의 저녁이 있는 삶 · 연간 125만명 실업급여 추가혜택 · 5년간 26만명 출퇴근재해 보상

8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이 구조개혁을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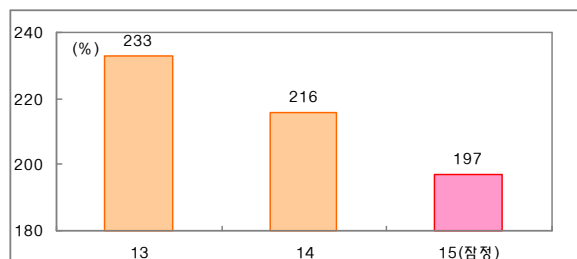
-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재정을 333조원 절감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목표 조기달성('17→'16년)
-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로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핵심위주 공공기관 기능조정(2단계 정상화)으로 조직·예산 간소화
 - * 87개 기관 중 52개 기능조정·폐지 + 인력 5,700명, 예산 7.6조원 절감
 -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15.12.3일)하여 '16년 4,441개 신규 일자리 창출

공무원 연금 재정부담액('16~85년간)



* 자료: 인사혁신처

공공기관(39개)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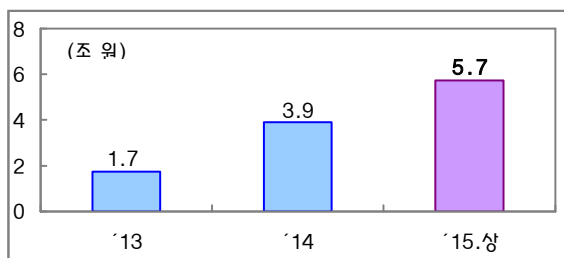


* 자료: 기획재정부

9 새로운 금융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 편의 제고, 실물경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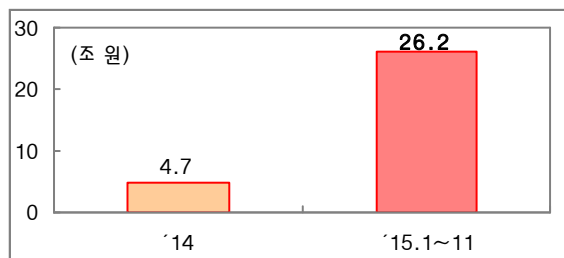
-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 만능통장(ISA) 등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경쟁 촉진
- 기술금융을 활성화하여 우수 창업·중소기업에 26.2조원 자금을 공급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로 보수적 금융 관행을 혁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금융사기 피해액 50% 이상 감소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 자료: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대출 규모



*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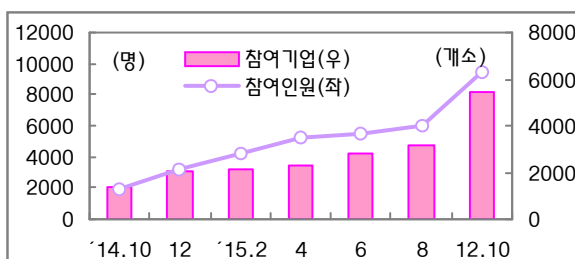
10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기반 마련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기본계획 수립,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기반 마련
 - 특성화고*, 전문대에 NCS기반 교육과정 등 현실성 있는 직업 교육 실시, 직무중심 직업훈련 도입으로 능력중심사회 발판 마련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 : ('12)37.5 ('13)40.9 ('14)44.2 ('15)46.6

-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 공감대가 확산되며 계획대비 운영학교 대폭 증가 등 교육과정 혁신(계획 1,500 → 실제 2,551개교)

일학습병행제 참여 추이



* 자료: 교육부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교 만족도 비교

	자유학기제	일반학교
· 학생 만족도	4.04	3.69
· 학부모 신뢰도	4.09	3.91
· 교사 만족도	4.22	3.93

* 자료: 교육부, 만족도는 5점만점

Ⅲ. 향후 과제

◇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구조개혁은 고통 수반되고 시간 소요
→ '15년은 구조개혁의 첫걸음, 앞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

1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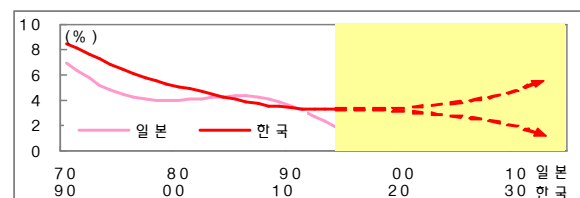
- 생산인구 둔화,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핵심 경제시스템 비효율, 생산성 향상 지체로 잠재성장률이 3%초반으로 둔화 추정
- KDI 등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0년대에는 1%대로 둔화 전망
→ 혁신 부재, 효율적 노동력 활용 미흡 등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 가속화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잠재성장률 추정(KDI)

구 분	잠재성장률
'11~'20	3.6
'21~'30	2.7
'31~'40	1.9
'41~'50	1.4
'51~'60	1.0

* 자료: KDI

한국과 일본 성장률 비교(20년 시차)



* 자료: IMF 자료 가공, HP 필터링

□ 인구절벽 대응, 구조개혁 완수, 신산업 전략으로 성장기반 확충

- ① 당면한 인구절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인구 확충
 -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
 - '결혼-임신-출산-육아'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 ② 4대부문 구조개혁 완수로 경제시스템 효율성 제고
 - 노동개혁법안 조속한 입법 등 노사정 대타협 차질없이 실천
 -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 ③ 창조경제, 산업개혁(신산업전략+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역동성 회복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규제프리존 도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신산업 전략 추진
 - 기업활력법 등으로 기존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2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성장을 조기에 탈출 못할 경우 구조개혁의 기초체력도 악화

- 내년에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저성장·저물가 지속 우려
 - 수출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14년 수출비중 25.4%)인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 둔화되고 있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내수도 노후부담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 제약 요인 상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속도도 미흡
- 성장률을 3%대로 조기에 제고하지 못하면 이력현상으로 2%대 성장세가 고착화되며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도 악화 우려
 - 특히, 올해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경상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용·임금·기업수익 등 체감경기 회복도 지연
 - 경제성숙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어려우나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5%대 경상성장률 유지 필요
- *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준 당시 경상성장률은 5%대임을 감안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 : (韓)4.2 (獨)5.0 (美)5.4 (濠)6.5

□ 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활성화로 3%대 성장세 복귀

- ①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으로 정상 성장궤도 조기 회복
 -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로 거시정책의 체감도 제고
 - 재정정책은 1/4분기 조기집행, 광의의 재정확대 추진
 -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 설정 계기로 저물가 탈피 노력 강화
- ② 구조적 소비부진 해소,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기반 강화
 - 고령층 실물자산 유동화, 가계소득 증대세제 점검·보완 등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 해소 노력 강화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전세→매매수요 전환 지원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 규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법 제정으로 유망 서비스업 체계적 육성
- ③ 신품목 육성, 중국 내수시장 등 신시장 창출로 수출 회복
 -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소비재·신성장 부품 수출 촉진
 -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강화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 G2 리스크 등 대외위험요인 확대

- 세계경제 구조변화 속에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세 둔화,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
- 최근 신용등급 상승에서 보듯 우리 경제는 양호한 펀더멘털로 차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필요
 - 특히, 향후 G2리스크 전개 방향에 따라 신흥국 불안이 심화될 경우 한계가구·기업 중심으로 국내경제에도 영향 우려

□ 대외 위험이 국내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① 대외 건전성 관리 :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 재검토
 -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거시건전성 3중세트 탄력 개편
 - 단기 외채,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관리
- ② 대내 건전성 관리 : 가계·기업부채 구조개선 노력 강화
 - 가계부채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차질없는 시행(수도권 '16.2.1일, 지방 '16.5.2일)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향(12.30)을 토대로 공급과잉업종 조기 정상화,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 유도
 - 재정준칙 강화, 지출 효율화 등으로 건전재정기조 유지

◇ 올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과거 위기를 통해 경험했듯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음”

◇ 올해와 내년이 우리 경제 제도약을 판가름하는 시기라는 절대 절명의 각오로 경제활성화·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